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

(1995. 1~3)

1995. 3. 31

남 궁 영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정 영 태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이 교 덕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이 현 경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目 次

I. 概 況	1
II. 對南誹謗 強化 吳 大民族會議 開催	2
1. 概觀	2
2. 經過	3
3. 分析	7
4. 展望	9
III. 北·美 核協商 履行 關聯 北韓의 態度	10
1. 概觀	10
2. 經過	11
3. 分析 吳 展望	14
IV. 南北經濟交流	16
1. 概觀	16
2. 經過	17
3. 分析 吳 展望	19
V. 朝總聯 動向	23
1. 概觀	23
2. 1995年度의 主力課題	24
3. ‘애국혁신운동’의 具體的 內容	25
4. 北韓政策의 支持活動	27
5. 展望	30

I. 概況

- 북한은 1994.7 김일성 사후 金正日體制의 공식 출범을 유보한 체 체제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바, 對南誹訪을 강화함으로써 내부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直接協商을 통해 핵문제 및 한반도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 對南次元에서 북한은 1995년에 들어 김일성 조문 불허에 대한 사과 요구, 국가보안법 철폐 및 비전향 장기수 석방, 안기부 해체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대남비방을 강화하는 한편, 南北當局間對話를 거부한 채 「대민족회의」 개최 제의 등 기존의 통일전선 전술을 계속 전개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민간차원의 남북경제교류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미국·북한간 「기본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은 미국과의 전문가 협상을 통해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강경히 거부하면서 체제안정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고,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경수로 지원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한편 조총련은 김일성 사망 등의 충격으로 심한 동요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組織強化에 주력하고 있음.

II. 對南誹謗 強化 및 大民族會議 開催

1. 概觀

- 북한은 1995.1.1 “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 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자”라는 당보, 군보, 청년보 共同社說을 통해 남한정권을 비난한 이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김일성 조문 불허에 대한 사과 요구, 국가보안법 철폐 및 비전향장기수 석방, 안기부 해체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음.
 -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 ‘지방자치화,’ ‘남북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신년사 발표 이후, 북한은 한국내 주요 사회현안문제와 연관시켜 김대통령에 대한 人身攻撃을 강화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유도함.

- 북한은 8.15 통일대축전과 대민족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종군위안부 서울 연대회의 불참과 한국정부의 민족적·인도적 대북접근 거부 등을 통해 統一戰線戰術을 예전과 변함없이 추구하면서 통일 투쟁을 선동함.

2. 經過

가. 對南誹訪 強化 및 反政府鬭爭 煽動

-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관련, 북한은 김영삼 정권을 5, 6共역대군부독재 정권보다 더욱 더 굴욕적 '사대매국정권,' '파쇼독재정권,' '분열주의정권'으로 규정하고, 김대통령의 世界化 구상, 민족우선론, 한국내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 왜곡보도하면서 각계각층의 연대적 정권타도를 선동함.
 - 「로동신문」은 1.13~2.26 '괴뢰역도의 집권2년 범죄록'을 33회에 걸쳐 연재하여 김대통령을 '배신자, 변절자, 인간추물,' '<을사오적>을 릉가하는 친일매국,' '군부독재기반우에 서있는 <문민> 독재자' 등으로 매도함.
 - 북한은 1.5~6, 3.7, 3.20 김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을 '반통일분열책동'으로, 유엔안보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노력과 김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구걸의교늘음'으로 비방함.
 - 1.16 「민민전」은 52개의 투쟁구호와 국가보안법 철폐, 콘크리트장벽 철거 투쟁 등을 주장한 통일구국선언을 발표하면서 한국민의 반정부·통일투쟁 방향을 제시하고, 「평양방송」은 2.27 학생들의 투쟁방법을 제시함.
- 한편 북한은 반민주·반민족·반통일 악법으로 간주하는 國家保安法 및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와 국가안전기획부 해체를 강도높게 주

장하면서, 非轉向 長期囚에 대한 송환을 촉구하였음.

-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공개질문장(2.1)을 통해 보안법에 대한 모순을 제기하고, 이어 대책위원회 발표(3.5)와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5회에 걸친 노동신문 연재(3.9~13)를 통해 보안법을 반민족 파쇼악법으로 매도하면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함.
- 2.28~3.4 사이 “<안기부>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연재(3회)를 통해 국가안전기획부를 ‘악명높은 정보모략정치의 소굴,’ ‘반공모략과 파쇼폭압의 총본산,’ ‘민족의 통일념원에 도전하는 모략기구’ 등으로 중상모략하고, 1.26, 3.23에는 특히 안기부에 대한 폭파를 선동함.

○ 이와 함께 북한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군사적 충돌, 韓國軍의 군사장비 반입·군사훈련, 그리고 핵폐기물처리장 건립계획을 대북도발 대비로 왜곡보도하였음.

- 한국 해군의 정책기조와 7대 주요추진과제(1.20), 군사장비반입과 군사훈련(4.3~8 예정) 등을 북침을 위한 한국군부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전쟁협주곡이라 규정함.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676호」(2.22)를 통해 2.1~10 사이 천암리·국화리·자아리·대룡리·금천리일대와 월비산리 남쪽 비무장지대 안에서 벌어진 남북한 군사적 충돌을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전쟁 책동’으로 허위 보도함.
- 한편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립에 대해 북한은 인민들의 의사

를 총칼로 누르고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조평통」, 1.31), 북에 대한 ‘방사능 전쟁포고’(「반핵 및 환경보호단체」, 3.3), ‘핵공세’(「조평통」, 3.16)로 주장함.

나. 大民族會議 開催 提議 및 南北接觸 拒否

- 북한은 1.24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고,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 단체 각계각층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면서 「통일대축전」과 「대민족회의」를 8.15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는 바, 이는 김일성 사후 최초의 對南 提議임.
 - 이 대회의 목적은 민족공동의 과제·통일방도 논의 및 민족대단결 실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대표자격은 기존의 남북 정부당국, 정당·사회단체 및 해외동포들임.
 -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의한 연방제 통일이 재차 강조되고, 국가보안법 철폐가 강력히 제기됨.

- 북한은 「대민족회의」 개최 제의 이후 일련의 결정서 채택 및 對南 便紙를 통해 대민족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한편, 남한의 남북간 현안문제 협의를 위해 차관급회의 개최 제의(1.25)를 거부함.
 - 북한은 「범민련북측본부 중앙유치원회 총회」(1.26), 「천도교청우당 조선천도교회 합동전원회의」(2.2) 등을 통해 대민족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결정서’를 채택함.

- 북한은 2.25까지 남한의 39개 단체 45명에게 편지를 보내 대민족회의 소집을 위해 평양·서울·판문점·제3국 어디서든 접촉을 갖자고 제의함.
 - 북한은 1.27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대민족회의 거부는 통일대화 참여의 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주장함.
- 한편 북한은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2.8) 담화를 통해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2.27~3.1)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발표하였으나, 2.26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남북간 공식 접촉을 회피하였음.¹⁾
- 북한은 1995.1 남측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초청을 수락하면서 연대회의를 위한 실무접촉의 시기와 장소를 남측에 일임한 바 있으며, 불참의 이유는 남측이 신변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民間次元의 접촉을 방해·저지하였다는 것임.
 - 2.27 「평양방송」은 “남조선 통치배들이 이번에 우리 대표단의 남행길을 가로막은 것은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그들의 반역적 책동의 일환인 동시에 당국 주도하에 북남대화를 독주하며 대결과 분열을 격화시키려는 파쇼적 전형의 표현”으로 주장하여 不參 責任을 남측에 전가함.

1) 북한은 남한에 대해 ‘남북한 공동대응책 협의’(1992.2), ‘민족공동위원회’ 구성제의(1992.3)를 통해 종군위안부 문제에 공동대응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음. 또한 북한 역시 「보상대책위원회」(1992.8)를 구성, 고소장을 발표하고 「종군위안부 범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보고서」(1993.8) 발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함. 이어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국제토론회」(1993.11)를 평양에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

- 북한은 한국정부가 생활용품 및 의화의 제3국을 통한 합법적 대북 반출을 허용하는 ‘남북교류절차안내서’ 배포 및 시행세칙 발표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1.28)함으로써 한국정부의 민족적·인도적 차원의 對北 接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음.
- 북한은 남한의 지침을 “우리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내부를 교란시키려는 불순한 술책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3. 分析

- 북한이 1995년 들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과 문민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극대화하면서 학생, 노동자, 재야, 北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연대적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권력 공백기 동안에, 내부결속을 강화함과 함께 남한내부 분열을 책동하고 남북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對南戰略인 것으로 분석됨.
- 남북한 군사적 충돌에 대한 구체적 날짜와 장소를 제시, 이를 전쟁위협으로 날조보도하고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폭파를 선동한 것은 대남공세 차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한국형 경수로 채택과 南北對話를 주장하는 한국정부에 강력한 군사적 경고를 주려는 의도로 분석됨.
- 非核化와 환경보호를 이유삼아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립계획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북한에 건설될 경수로가

평화적 목적임을 전제하고,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전략적 의도로 분석됨.

- 한편 북한의 「대민족회의」 소집 제의는 미·북 제네바합의문에 명기된 南北對話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인식을 미국측에 심어 주면서 남북대화 중단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한편, 해외동포를 포함 한국내 각계각층의 대북접촉 및 대화를 선동, 정부와 국민간의 분열책동을 유도, 대북접근에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이 제의한 「대민족회의」 소집은 대남전선전술적 차원에서 年初에 발표되는 의례적인 것으로 「연석회의」(1988.1), 「정치협상회의」(1989.1, 1991.1), 「범민족대회」(1989.9) 등과 비슷한 내용과 형식의 집회임.
 - ‘준비접촉’이나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과거 유사한 제의와는 달리 정권타도와 보안법 철폐 투쟁을 선동하고 있음.
 - 대내용인 「중앙방송」을 통해 보도한 점으로 보아 당·정관료 및 주민들에게 김정일 승계와 연방제통일론의 승계를 동시에 인식시키려한 것임.
- 또한 종군위안부 서울 연대회의 불참은 행정절차상 한국정부와의 접촉이 불가피해지고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再開될 수 있겠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

4. 展望

- 김영삼 대통령은 미·북 기본합의문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응징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북한은 김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과 文民政府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방을 더욱 더 강화할 것임.
- 또한 북한은 김정일의 대남전략 및 통일론을 대내외에 알리고 統一戰線戰術을 강화하기 위해 대민족회의 소집,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안기부 해체, 연방제통일론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평화를 위장한 통일공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 북한은 4.19 혁명일을 계기로 문민정부를 3黨合黨에 의한 군부정권의 연장으로 매도, ‘한총련’ 위주의 학생시위를 장려하고, 5.1 노동절을 겨냥해 문민정부의 노사정책을 강력히 비난, 노사분열을 유도해 노동자와 학생 청년들과의 연대적 반정부 투쟁을 선동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함께 6.27 지자제선거 전까지 선거운동 혼탁, 정당간의 극한적 비방, 지역분열 폭발 등이 전개될 경우, 북한은 이를 확대 보도, 남한내부의 분열과 국민의 대정부불신을 유도하는 대남교란전술을 구사하면서 ‘남조선혁명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Ⅲ. 北·美 核協商 履行 關聯 北韓의 態度

1. 概觀

- 북한과 미국은 북한핵문제 논의 과정에서 1994.10.21 「기본합의문」을 채택하였는 바, 同 합의문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核施設 凍結(550, 200 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또는 건설 중단, 방사화학실험실 폐쇄)을 조건으로 한 미국의 對北 경수로 건설 지원임.
 - 「기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 경수로 지원 관련 국제컨소시엄(KEDO)을 구성, 이를 대표하여 합의문 서명 6개월 내(1995.4.21)에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북한과 1994년에 미국은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이래(北京, 1994.11.30~12.2), 1995년에 들어 2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1995.3.9 미국은 한·미·일 주축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구성하였음.
 - 2차회의: 베를린 1995.1.28~2.1, 3차회의: 1995.3.25~27

- 그러나 제3차 전문가회의 결과,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형에 관해 미·북한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북한은 미국측이 「한국형 경수로」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그간 동결해온 핵시설(특

히 5메가와트 원자로)을 재가동함으로써 북·미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음.

- 미국은 KEDO 설립협정 2조에 명시된 「한국형 표준 경수로」 수용을 주장하고 있음.

2. 經過

가. 제2차 미·북 전문가 협상 개최 및 결과

○ 제2차 미·북 전문가 협상은 「기본합의문」의 규정과 제1차 협상에서의 「공동 보도문」의 합의에 따라 김정우(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와 게리 세이모어(Gary Samore, 핵담당 대사 보좌관)를 대표단장으로 하여 1.28~2.1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으며, 협상결과 다음과 같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였음.

-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기간안에, 그리고 합의문 사항들에 부합되게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제공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되도록 협조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함.
- 경수로 제공 협정 체결을 위하여 합의되어야 할 주요 문제들인 원자로형과 제공범위, 재정문제, 계약체결 방식, 핵안전과 책임,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 등의 안건을 확정함.
- 이와 함께 양측은 핵안전 문제에 대한 기술을 협의하고, 同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는데 합의하였음.

- 그러나 북한은 제2차 협상시작 이전부터 輕水爐型의 선택권이 북한에 있으며, 한국형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시사하였는 바, 미·북한은 이러한 공동 보도문을 제외하고는 주요 사안들, 특히 경수로형(한국형 경수로) 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음.
 - 북한은 1995.1.16 외교부 대변인의 조선 중앙통신사 기자회견을 통하여 “남조선형을 계약에 명기하겠다는 것은 조·미 합의에 따른 경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같다”고 천명하였음.
 - 북한은 제2차 전문가 협상 대표단의 베를린 도착 성명을 통하여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가 「有償」이라는 조건 아래, “경수로형 선택의 권리는 북한측에 있다”고 하면서, “계약 주체도 미국과 북한이 되어야 한다”(제2차 전문가 협상 대표단의 베를린 도착 성명)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 한편 제2차 협상 이후 1995.3.9 KEDO 발족시 한·미·일은 「한국형 경수로」에 합의하였으나, 북한은 KEDO 협정과는 별개로 자신들과 체결할 경수로 공급협정에는 절대로 「韓國型」을 명기할 수 없다고 공언하였음.

- 또한 북한은 미국측의 한국형 경수로 수용 요구로 인하여 4.21까지 경수로공급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그간 동결해온 핵시설들을 재가동하겠다고 계속 공언하였는 바,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

장은 미국의 갈루치 핵담당 대사에게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명백히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였음(3.2).

- 미국은 목표시한인 4.21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측은 동결해온 핵시설들을 즉각 재가동할 것임.
- 그러나 만일 공급협정이 4.21 이후에 체결된다면 즉각 핵시설의 재가동을 멈추고 동결할 것임.

나. 제3차 미·북 전문가 협상 개최 및 결과

- 이러한 상황에서 1995.3.25~27 미국과 북한은 경수로 제공 관련 제3차 전문가 협상을 베를린에서 개최하였으나, 별 성과 없이 종결되었고, 협상 결과에 대해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3.29 「중앙방송」을 통해 협상결렬이 아니라는 점과 협상 타결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협상에서 북측은 “경수로형 문제와 관련하여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측은 북측안을 “연구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입장변화를 시사하였음.
- 이에 따라 “조·미 쌍방은 협상을 일단 휴회하고 다음번 협상을 4월 중순 베를린에서 다시 열기로 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번 미·북한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님을 강조함.

- 북측이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상 문제해결 전망은 전적으로 대화 상대방의 성실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功을 미국측에 넘겨놓았음.
- 同 협상에서 북측의 ‘획기적인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경수로 모델(컨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의 CE-80 모델) 수용
 - 공급 주계약자로 한·미·일 3국 컨소시엄 수용(단 주계약자로 한국 단독기업 수용 불가)
 - 경수로 건설을 위한 미국의 법적 보장 및 안정상 이유로 경수로 일부 설계 변경 요구
 - 러시아가 한국에 진 채무를 상환하는 형식으로 원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은 그 원자료를 북한측에 넘겨주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음(인테르 팩스 통신, 3.5)

3. 分析 및 展望

- 현재 북한의 핵협상 목표는 체제안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시에 경수로 건설을 계기로 西方技術의 파급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경수로 지원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분석되는 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북측의 선호도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음.

- 1순위: 독일 경수로 또는 러시아 경수로
- 2순위: 미국 경수로
- 3순위: 한국 경수로

○ 한편 제3차 전문가 협상에서 북한은 미국 경수로(CE-80 모델) 수용을 희망하면서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경수로 지원에 대한 미국의 '법적 보장'을 요구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수로 협정 체결에 호응할 의사가 없는 것을 의미함.

- 미·북한 「기본합의문」 합의시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 서면보장이 미국 朝野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한 것을 상기할 때, 국회비준 등과 같은 미국의 '법적 보장'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인 것임.

○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현재 북한은 순탄한 경수로 협정 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비현실적인 요구(한국형 경수로 수용 이외의 요구)로 同 협상의 난맥상을 조장하여 미국과의 접촉범위 및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한·미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양국간의 同盟體制 약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만약 미국측이 최소한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획기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새로이 조성하게 될 가능성 조차도 배제할 수 없음.

IV. 南北經濟交流

1. 概觀

- 1988년 對北 경제개방 조치 이래 1994년까지의 교역승인총액은 8억 8,184만 달러이며, 통관총액은 6억 9,802만 달러임.
- 1994년 교역승인규모는 반입 2억 352만 달러, 반출 2,542만 달러로서 합계 2억 2,894만 달러임.
 - 1993년 대비 반입, 반출이 각각 8%, 148%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15% 증가하였음.
- 통관실적은 반입 1억 7,630만 달러, 반출 1,825만 달러로서 합계 1억 9,455만 달러임.
 - 1993년 대비 반입은 1% 감소, 반출은 21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4.3% 증가하였음.
- 이러한 남북교역규모는 약 18억 달러로 평가되는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3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1995년 들어 2월 말까지의 교역승인실적은 3,123만 달러(반입 2,531만 달러, 반출 592만 달러)로 전년 동기 2,742만 달러에 비해 13.9% 증가하였음.

남북한 연도별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계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1988	1,037	-	-	-	1,037	-
1989	22,235	18,655	69	69	22,304	18,724
1990	20,354	12,278	4,731	1,187	25,085	13,465
1991	165,996	105,722	26,176	5,547	192,172	111,269
1992	200,685	162,863	12,818	10,499	213,503	173,362
1993	188,528	178,166	10,262	8,425	198,790	186,591
1994	202,952	176,298	24,952	18,248	228,944	194,546

2. 經 過

가. 1월 동향

- 1995년 1월중 남북교역 승인실적은 총 116건, 45개 품목, 1,356만 달러이며, 이중 반입승인은 66건, 936만 달러, 반출승인은 50건, 420만 달러임.
- 교역승인실적은 전년동기(49건, 1,188만 달러)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14.1% 증가하였음.
- 반입승인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1.4% 감소하였고, 반출승인실적은 176.5% 증가하였음.

- 반입품목은 금괴, 아연괴 등 철강금속류가 47%(493만 달러), 섬유류 23.8%, 한약재 21.5%이며, 반출품목은 위탁가공 원부자재인 섬유류 35.8%(225만 달러), 농수산물 4.3%, 기계전자제품 0.5%임.
 - 특히 드라이크리닝기(13대)와 사과(100톤)가 처음으로 반출승인 되었으며 설탕(8,307톤, 371만 달러)이 대량 반출되었음.
- 交易仲介地는 홍콩 77건, 중국 12건, 일본 5건 등이고 북한과의 직 교역이 3건 성사되었음.
- 1월중 위탁가공교역 승인실적은 반입승인액 기준으로 30건, 241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3% 증가하였음.

나. 2월 동향

- 2월중 남북교역 승인실적은 65건, 43개 품목, 1,768만 달러이며, 이 중 반입승인은 52건, 1,595만 달러, 반출승인은 23건, 172만 달러임.
 - 교역승인실적은 전월의 116건, 1,356만 달러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30.4%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53건, 1,554만 달러)에 비해서도 13.7% 증가하였음.
 - 반입승인실적은 전월에 비해 70.4% 증가하였으나 반출승인실적은 58.9% 감소하였음.

- 반입품목은 철강금속이 1,360만 달러로 85.3%를 차지하였고 섬유류 6.3%, 농·임산물 2.7% 등이며, 반출품목은 섬유류 39.9%, 화학제품 2.4% 등임.
 - 특히 여성용화장품 2,000개가 최초로 반출되었음.
- 2월중 위탁가공교역 승인실적은 반입승인금액 기준으로 8건, 73만 달러임.
 - 1995년 1~2월중 실적은 39건, 327만 달러로 전년동기(15건, 278만 달러)에 비해 17.7% 증가하여 위탁가공교역의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3. 分析 및 展望

- 1994년 남북교역은 전년에 대비하여 ① 반출급증·반입감소, ② 교역품목 증가, ③ 直交易 증대, ④ 위탁가공교역 급증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1994년 남북교역 통관실적은 반출이 1,824만 달러로 2.2배 증가한 반면, 반입은 1억 7,630만 달러로 1.0% 감소하였음.
 - 對北搬出의 급증은 위탁가공용 섬유류와 설탕, 세계 등 생필품의 반출이 대폭 증가한데 원인이 있음.
 - 반입통관 감소는 금괴, 아연괴, 빌레트 등 철강·금속류의 반입통

관이 전년비 11.6% 감소한데 기인함.

- 1994년중 남북교역 품목수는 통관기준으로 반입 83개 품목, 반출 42개 품목, 합계 125개 품목으로 전년보다 27개 품목이 증가하였음.
 - 남북교역 품목수는 1991년 67개에서 1992년 105개로 늘었다가 1993년 98개로 줄어든 바 있음.
 - 특히 반출통관 품목수가 1993년의 21개에서 1994년에 42개로 크게 늘었음.

- 1991년 쌀, 무연탄 등 1,435만 달러의 直交易이 이루어진 이후 줄곧 감소해 오던 직교역이 1994년 들어 회복세를 보였음.
 - 1994년중 직교역 승인액은 1,036만 달러로 전체 남북교역의 45.2%를 차지, 전년의 344만 달러, 1.73%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
 - 특히 대북반출에 있어 1993년에 全無했던 직교역이 1994년에는 339만 달러에 달해 전체 반출액의 13.3%를 차지하였음.
 - 직교역 건수도 1993년의 14건에서 1994년에는 22건으로 늘어났으며, 품목도 종전의 한약재 중심에서 토상흑연, 로얄제리, 설탕·비누 등 생필품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연도별 직교역 승인추이

(단위: 천 달러, 건)

연 도	건 수	금 액		합 계	비 중
		반 출	반 입		
1991	3	5,805	8,550	14,358	7.47%
1992	11	385	7,987	8,372	3.92%
1993	14	-	3,447	3,447	1.73%
1994	22	3,388	6,978	10,366	4.52%

○ 한편 1994년 남북교역은 위탁가공교역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1994년의 위탁가공 승인실적은 2,856만 달러로서 1993년 799만 달러의 3.6배 증가,
- 전체교역액중 위탁가공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의 4.0%에서 12.5%로 확대되었음.

대북한 위탁가공교역 현황(승인기준)

(단위: 천 달러)

연 도	남북교역 총액	위탁가공교역	비 중
1993	198,790	7,996	4.0%
1994	228,944	28,564	12.5%
증가율	15.2%	357%	-

- 南北交易은 1988년 이래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4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 지연, 김일성 사망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지속, 북한 경제난 심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이 15.2%나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도 남북교역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위탁가공교역의 전년대비 3.6배 증대는 1994년중 남북교역 총액이 전년대비 15.2% 증가한데 비하여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 바, 委託加工交易은 향후 남북한 교역의 주요 형태로 등장하는 한편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사업으로서 매우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위탁가공교역의 주요 품목인 의류·신발 분야는 북한이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점에서도 향후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의 지속적인 확대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V. 朝總聯 動向

1. 概觀

- 현재 조총련은 1세대의 은퇴와 김일성 사망 등으로 인해 조총련과 북한간의 연결고리도 어쩔 수 없이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심하게 동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해마다 5~6천명이 '韓國國籍'으로 옮기고 조총련조직을 탈퇴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북한 방문길에 나서는 숫자도 매년 줄어들고 있음.
 - 또한 일본정부의 차별적 제도에 따라 취직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데다, 조총련계 학생들에 대한 일본 우익들의 거둬들이는 데려 때문에 조총련계 학교의 학생이탈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조총련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총련계 商工人들의 동요도 증대하고 있음.
 - 이들은 북한의 잦은 모금에 대해 반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北·日修交가 이루어질 경우 조총련 소유의 사유재산이 북한의 국가재산으로 환수될지도 모른다는데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이은 충성' 강요에 식상감을 표시하고 있음.
- 이처럼 김일성 사망 이후 조직의 이완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조총련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과제는 김정일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조직으로의 분위기 일신과 응집력 강화일 수 밖에 없음.

2. 1995年度の 主力課題

- 김정일은 1.1 한덕수 조총련 의장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신년 축전을 보내고 이 속에서 조총련이 올해 달성해야 할 과제의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조총련은 1.10 동경에서 중앙열성자대회를 열고 1995년도의 주력과제로서 다음 4가지를 선정하였는 바, 이는 조직강화라는 단일한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임.
 - 조총련을 김정일에 충성하는 일심단결된 애국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킴.
 - 각계각층의 재일동포를 조총련조직으로 끌어들이어 결집시킴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함.
 - 민족교육이 조총련활동의 생명선이자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민족교육을 전동포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며 동포의 諸권리옹호에서도 전진을 이룩함.
 - 민족대단결하에서 통일애국역량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에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며 대외활동에서는 일본당국이 북한과 진정한 선린우호관계를 맺도록 일본 내의 여론을 환기시킴.

- 조총련은 1995.2.2 중앙위원회 제16기 제4차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4가지 주력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였음.
- 2월부터 5월까지 ‘대중적인 애국혁신운동’을 전개하며, 4월에 개최되는 ‘평양 국제체육·문화제전’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결의함.
- 또한 관서지방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함.

3. ‘애국혁신운동’의 具體的 內容

- 애국혁신운동은 김정일이 새해를 맞아 한덕수 의장에게 보낸 축전 속의 지침을 재일동포 사회의 현실에 맞게 조율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조직의 확대 및 강화로 집약될 수 있음.
- 조총련을 김정일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김정일의 ‘위대성 교양사업’의 폭을 새 세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동포에로 확대해 나가고, 김정일 탄생 53주년 경축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함.²⁾

2) 구체적인 사업계획에는 김정일의 위대성을 알리는 영화상영, 비디오물인 「김정일 장군」 및 김정일 칭송 노래 보급, 김정일에 관한 출판물 구매운동과 김정일을 우상화할 수 있는 대소규모의 강연 및 해설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2월 15일에는 김정일 생일을 경축하는 조총련 중앙대회가 동경에서 열린 것을 비롯하여 일본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됨.

- 젊은 동포들과 상공인의 조직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부와 분회, 상공회, 조선청년동맹, 여성동맹을 비롯한 기층조직의 강화에 힘쓰며, 이를 위해 2월 20일부터 全家口 방문운동을 실시함.
 -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체육사업과 행사들을 통해 조총련 동포들의 유대를 강화하며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의 구독자를 늘이는데 노력함.
 - ‘민족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동포자녀들을 조총련계 학교와 유치반에 입학시켜 학생수와 원아수를 증가시키는데 진력함.
 - 조총련계 상공인들의 기업권을 위시한 제반 권리를 굳건히 지키고 민족결혼문제 등 동포들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더욱 헌신함.
 - 일본의 각계인사들과 활발히 접촉하여 북한의 통일방식에 대한 일본내 지지자를 늘이며, 北·日 친선운동의 전개를 통해 일본정부가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도록 일본의 사회여론을 유도함.
- 특히 조총련 지도부는 조직강화의 성공여부가 재일교포들이 현실 생활에서 직면하는 제반의 불편요소를 제거해주는 데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대우개선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 법제도의 시정, 교포들의 생활상 고민해결에 전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을 정함.
- 세부적인 실천사항으로서 조총련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국공립대학 입학수험자격에서 받고 있는 차별철폐를 위해 투쟁함.

- ‘국민연금법’의 공평한 적용과 ‘외국인등록법’의 근본적인 시정 등을 위해 각지에서 요청행동, 의회청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대중운동을 벌임.
- 생활상 고민해결을 위해 동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 문제, 세무상 문제, 결혼문제, 노후대책 등에 관한 상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강조됨.

4. 北韓政策의 支持活動

-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는 북한이 1.24 제의한 8·15경축 대민족회의 개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1.28 발표하고, 이의 실현에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함.
 - 이를 위해 조총련 지도부는 대민족회의에 민족의 성원으로서 기여 참여함은 물론, 民團同胞들의 회의동참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함.
- 또한 조총련은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등 남한의 非轉向 長期囚들의 북한송환 촉구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조총련은 1994.12 초 ‘송환실현의 會’를 조직한 이래 동경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집회를 열고 이 집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공개 송환요청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장기수들에게 격려편지와 물품 등을 송부하고 있음.

○ 한편 조총련은 북한이 대내외 과시를 위해 벌이는 4월의 평양축전이 대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평양축전 관광객 모집을 독려하고 있음.

- 「조선신보」 1월 17일자 사설은 “총련동포들은 물론 많은 민단, 미조직 동포들이 평양축전 관광에 가도록 적극 사업할 것”과 “광범한 일본인민들이 축전참가를 위해 공화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선전조직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조총련은 北·日 관계개선을 위한 北·日 연대운동을 지역단위의 운동으로 확대하고 있으며,³⁾ 北·日 수교교섭에서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과거청산과 보상문제에서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중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함.

- 대중운동의 구체적 내용은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을 폭로·선전하고 일본의 과거 식민지통치와 침략전쟁에 관한 각종 심포지움, 사진전시회, 강연회를 개최하며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동포들의 피해진상 조사사업과 함께 희생된 동포들의 추도비 및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한다는 것임.

- 이와 더불어 올해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과거

3) 조총련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본내 일부 진보적 인사들과 함께 北·日 관계개선을 촉구하는 조직을 결성하고 있음. 예컨대 3.3 ‘日·朝우호 이바라기縣 연락협의회’를 결성한데 이어 3.11에는 동경에서 ‘日·朝국교정상화축진 국민포럼’을 결성함.

죄행을 규탄하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적 여론을 환기 시켜 나가기로 함.

○ 이밖에 조총련은 「조선신보」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한국형 경수로’ 채택의 부당성과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책임이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반대하는 남한측에 있음을 널리 홍보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총련의 이런 활동에 대해 매년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을 송금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주로 소위 ‘민족교육’을 위한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에 집중되어 있음.

- 1.1 김정일은 김일성의 뒤를 이어 조총련에 1억 35만엔의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을 송금함. 이는 작년 9.9 북한건국 46주년을 맞아 김정일 명의로 처음 송금된 이래 두번째임.

- 1.8 김정일은 한덕수 의장 앞으로 관서지방대지진 피해에 대한 위로전문을 발송한데 이어 1.25에는 100만 달러의 지진피해 위문금을 송금함.

- 2.15 김정일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또 다시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으로 1억엔을 송금함.⁴⁾ 이에 감사하는 조총련모임이 2.25 오오사카 본부회관에서 성대히 거행됨.

4) 이제까지 김일성 및 김정일이 조총련에 보낸 교육원조비 총액은 130회에 걸쳐 423억 1,334만 2,433엔에 달함.

5. 展望

- 조총련의 조직강화 노력은 최근 젊은 세대의 재일교포 수가 늘어나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금년은 조총련 내에 김정일의 지도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첫 해이자 조총련결성 40주년이라는 시기적 상징성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김정일 이상화를 병행한 조총련의 조직강화 작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 조총련은 4월로 예정된 평양축전의 성공을 위한 관광객 동원에 주력할 것임.
 - 1995.1.11자 「每日新聞」의 보도를 근거로 추정할 때 북한은 평양 축전기간 동안 외국관광객이 약 2만명 정도는 訪北해야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며, 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의 관광객 동원이 조총련에 할당된 것으로 보임.
- 2/4분기 이후에는 북한이 제의한 8·15 통일대축제 및 대민족회의 개최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하면서 민단동포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공세가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北·日 국교정상화를 촉구하는 일본내 여론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됨.
 - 조총련은 현재 약 25만명으로 약 37만명에 달하는 民團에 열세이나 北·日 국교정상화 이후 駐日 북한대사관이 생기고 해외여행때 여행증명서 대신 북한여권을 소지하게 되는 등 민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해소되면 '조선국적 회복운동' 등을 통해 '대반격작전'을 벌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 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외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의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4)

〈資 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
(1995. 1~3)

統一情勢分析 95-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5년 4월 일
發行日 1995년 4월 일
